

행정학

- 총평 -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시험은 전반적으로 기본이론 중심의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나, 지문 길이 증가와 개념 혼합형 문제가 확대되면서 체감 난도는 중상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단순 암기형 문항은 감소하고, 행정이론·정책·조직·재무·지방행정 등 전 영역에서 이론의 이해와 적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특히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정책모형 등 핵심 이론을 비교하거나 상황에 적용하는 유형이 증가하여 개념 간 구분 능력이 중요한 변별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례형 및 독해형 문제가 강화되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빠른 지문 파악과 핵심 개념 추출 능력이 요구되었으며, 오답 선택지 역시 유사 개념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구성됨에 따라 단순 암기로는 정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은 난도 자체보다는 시간 관리, 독해력, 그리고 이론의 구조적 이해 여부가 성적을 좌우하는 시험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비를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론 간 비교 정리를 강화하고,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과 함께 지문 독해 속도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01.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굴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 ㄴ.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 ㄷ.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를 통해 정당정치에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 ① ㄱ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이론 - 행정학의 발전과정(고전행정학, 정치·행정이원론, 관방학)

● [출제의도]

행정학 초기 발전 흐름에서 주요 학자와 핵심 개념의 정확한 연결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Gulick의 행정관리 기능(POSDCoRB)
- 관방학의 발생 국가
-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

□ 기본 이론 암기의 정확성을 묻는 문제

● [보기해설]

ㄱ. 굴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 POSDCoRB는 행정관리 기능(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을 의미하며, Gulick과 Urwick이 제시한 고전 행정관리론의 핵심 개념이다.

ㄴ. 관방학은 ...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 관방학(Camera Science)은 독일에서 시작된 학문으로, 절대군주국가에서 관료에게 재정·행정 운영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 ㄷ.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 윌슨은 「행정연구(1887)」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0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 ②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④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인사행정론 - 인사행정제도(엽관주의 vs 실적주의)

● [출제의도]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개념적 차이와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민주성 vs 전문성
- 정치성 vs 중립성
- 인사행정의 기본 비교구조 이해 여부 확인

● [보기해설]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권교체 시 공직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 엽관주의는 정권에 따라 인사가 교체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약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 실적주의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용제도로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사회적 형평성 확대는 대표관료제 또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의 영역이다.

④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 펜들턴법(1883)은 미국에서 실적주의를 확립한 법으로, 공개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화하였다.

03.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③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할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정책이론 - 정책과정 참여자(공식적 참여자 vs 비공식적 참여자)

● [출제의도]

정책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공식적 참여자(대통령, 의회, 행정기관)
- 비공식적 참여자(언론, 이익집단 등)
- 행정기관의 재량권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
- [보기해설]
-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의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핵심적인 공식 참여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통령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핵심 공식 참여자이다.
- ③ 행정기관은 ...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행정기관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상황 판단에 따라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특히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정책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제4부로 지칭된다.
- 언론은 여론 형성 및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제4부'로 불린다.

04.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 ③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 ④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정책이론 - 정책의제설정 / 무의사결정론

● [출제의도]
무의사결정론의 적용 범위 + 권력 작용 방식 이해 여부 평가
특히, "비강압적 방식" 표현의 정확성 판단

● [보기해설]

④ 무의사결정은 강압적 방법보다는 규칙·절차를 활용한다.
→ 무의사결정은 주로 비가시적 권력(제도·절차)을 통해 작동하지만 반드시 비강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황에 따라 압력, 권력 행사 등 강압적 방식도 포함 가능

05.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주된 조정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의 규모가 크다.
-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다.

- ① 사업부제 ② 애드호크라시
- ③ 기계적 관료제 ④ 전문적 관료제

정답 : ④

● [출제영역]
조직이론 -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

● [출제의도]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을 조정기제, 핵심구성요소, 대표 사례와 연결하여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 기술의 표준화
- 핵심운영부문 중심
- 병원·대학 사례를 통해 전문적 관료제를 판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

● [보기해설]

① 사업부제
→ 사업부제(divisionalized form)는 산출물의 표준화를 주된 조정방법으로 하며, 대기업처럼 여러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병원이나 대학처럼 전문직 종사자가 핵심운영부문을 이루는 조직과는 거리가 있다.

② 애드호크라시
→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상호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으로, 프로젝트팀이나 연구개발조직처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형태이다. 병원·대학처럼 전문직 지식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과는 다르다.

③ 기계적 관료제
→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작업과정의 표준화가 핵심이며, 규칙·절차·계층제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전통적 행정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 문제의 핵심은 기술의 표준화이지 작업과정의 표준화가 아니다.

④ 전문적 관료제
→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기술의 표준화를 조정기제로 하며, 의사·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핵심운영부문을 이룬다. 병원, 대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06.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나)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 (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라)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 ① (가)→(라)→(나)→(다)
- ② (가)→(라)→(다)→(나)
- ③ (다)→(가)→(라)→(나)
- ④ (다)→(가)→(나)→(라)

정답 : ②

● [출제영역]

재무행정론 - 예산과정(예산편성 및 심의절차)

● [출제의도]

우리나라 예산과정에서 정부편성 → 국회제출 → 국회심의 → 본회의 의결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 [보기해설]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② (가)→(라)→(다)→(나)

(가)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

(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나) 국회 본회의 의결

07.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정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수입
- ② 이자수입
- ③ 사용료수입
- ④ 재산매각수입

정답 : ④

● [출제영역]

지방행정론 - 지방재정(세외수입의 구분)

● [출제의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정상적 수입 vs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 재산매각수입 = 임시적 수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

● [보기해설]

① 사업수입

→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 정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② 이자수입

→ 예치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반복적으로 발생

□ 정상적 수입

③ 사용료수입

→ 시설 이용 등에 따른 수입으로 지속적 발생

□ 정상적 수입

④ 재산매각수입

→ 토지·건물 등 자산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0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 ②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 ④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인사행정론 - 대표관료제

● [출제의도]

대표관료제의 **개념·목적(형평성)**과 **실적주의(능력주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대표관료제 = 형평성 / 실적주의 = 효율성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 [보기해설]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 오히려 실적주의(능력·성과 중심)와는 긴장관계에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0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메타문제(meta-problem)를 추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포화표본을 다단계 과정으로 추출한다.
○이해관계자의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도수 분포표를 작성한다.

- ① 경계분석
- ② 분류분석
- ③ 유추분석
- ④ 인과분석

정답 : ①

● [출제영역]

정책이론 - 정책분석기법(경계분석)

● [출제의도]

정책문제 정의 단계에서 활용되는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메타문제(meta-problem)

• 이해당사자 포화표본

• 누적도수 분포표

□ 경계분석의 핵심 키워드 인식 여부를 묻는 문제

● [보기해설]

① 경계분석

→ 경계분석은 정책문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문제를 확장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이다.

→ 포화표본 추출, 누적도수 분포표 작성 등을 통해 메타문제 도출에 활용된다.

② 분류분석

→ 분류분석은 정책문제나 대안을 유형별로 구분·체계화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이나 누적도수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

③ 유추분석

→ 유추분석은 과거 사례나 유사 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를 이해하는 기법으로, 메타문제 도출이나 이해관계자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④ 인과분석

→ 인과분석은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문제 범위 설정이나 경계 설정과는 다른 접근이다.

10.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술유형은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조직구조는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

- ① 기능(craft)
- ② 공학(engineering)
- ③ 정형화된(routine) 기술
- ④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

정답 : ②

● [출제영역]

조직이론 -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 [출제의도]

페로의 기술유형을 과업의 다양성 × 분석가능성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다양성 높음 + 분석가능성 높음 = 공학적 기술”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 [보기해설]

① 기능(craft)

→ 기능적 기술은 과업 다양성은 높지만 분석가능성은 낮다. 경험과 숙련에 의존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장인작업이 해당한다.

② 공학(engineering)

→ 공학적 기술은 과업 다양성: 높음, 분석가능성: 높음

→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과학적으로 해결 가능

→ 조직은 유연하지만,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은 비교적 집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정형화된(routine) 기술

→ 정형화 기술은 다양성: 낮음, 분석가능성: 높음

→ 반복적이고 규칙화된 작업 (예: 공장 생산라인)

④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

→ 비정형 기술은 다양성: 높음, 분석가능성: 낮음

→ 문제 해결이 어렵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1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
- ② 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 ③ 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 ④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이론 - 주인-대리인 이론(정보비대칭과 해결방안)

● [출제의도]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정보비대칭 해결기법(선별·신호발송·평판·다수 대리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 **누가 정보를 제공하는가(주인 vs 대리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 [보기해설]

① 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경쟁 유도

→ 선별은 주인이 계약조건 등을 통해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다수 대리인 활용은 multiple agents에 해당한다.

② 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 구축

→ 평판은 과거 행동이나 성과를 통해 대리인의 신뢰성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 정보체계 구축 설명은 일반적 정보관리이지 평판 개념과 다르다.
- ③ 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 신호발송은 대리인이 주인에게 자신의 능력·자질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예: 학력, 자격증, 경력
- ④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복수 계약 제시
- 다수 대리인은 여러 대리인을 활용하여 상호 경쟁 및 감시 효과를 유도하는 방법. 복수 계약 제시는 선별(screening) 개념이다.

12.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 ① ㄱ ② ㄱ, ㄴ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 ④

● [출제영역]

정책이론 - 정책평가 및 정책오류(Type I·II·III 오류)

● [출제의도]

정책평가에서 발생하는 제1종·제2종·제3종 오류의 개념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실제 vs 판단”의 불일치 구조를 구분하는 능력 확인

● [보기해설]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 → 제1종 오류

→ 제1종 오류(Type I error)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 (false positive)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 → 제2종 오류

→ 제2종 오류(Type II error)는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false negative)

ㄷ.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 제시 → 제3종 오류

→ 제3종 오류(Type III error)는 문제 자체를 잘못 설정하여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모두 옳다.

13. 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 ②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 ③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 ④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환류론 - 행정책임성(롬젝·듀브닉 모형)

● [출제의도]

행정책임성을 통제의 원천(내부/외부) + 통제 강도(높음/낮음)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법률적 책임성의 외부 통제 여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 [보기해설]

- ①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다.
→ 법률적 책임성은 법원, 헌법, 법률 등 외부 통제에 해당하며 통제 강도는 높다. 따라서 “내부 통제”라는 부분이 틀림
- ② 정치적 책임성은 외부 통제이며 통제 강도가 낮다.
→ 국민, 의회, 여론 등에 의해 통제되는 외부 통제 + 낮은 강도
- ③ 전문적 책임성은 전문지식에 기반하며 통제 강도가 낮다.
→ 전문가의 자율성과 판단에 의존 내부 통제 + 낮은 강도
- ④ 계층적 책임성은 상급자 명령·SOP 준수
→ 조직 내부의 계층제에 따른 통제, 내부 통제 + 높은 강도

14.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두효과(primacy effect):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 ② 상동오차(stereotyping):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 ③ 뿔효과(horn effect):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 ④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정답 : ③

● [출제영역]

인사행정론 - 근무성적평정(성과평가 오류)

● [출제의도]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오류 유형을 개념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후광효과 vs 뿔효과 구분 여부 확인

● [보기해설]

- ① 초두효과(primacy effect)
→ 초기 인상이 이후 평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처음 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오류
- ② 상동오차(stereotyping)
→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평가하는 오류
 예: “짧으면 능력 있다”
- ③ 뿔효과(horn effect)
→ 뿔효과는 부정적인 한 요소가 전체 평가를 낮추는 현상이다.
→ 문제 지문은 “긍정적 영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후광효과(halo effect) 설명이다.
- ④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 평정자의 일관된 성향(관대화·엄격화 등)에 의해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거나 낮아지는 오류

15.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공직자 재산등록
- ㄴ.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ㄷ.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ㄹ.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환류론 - 공직자윤리 및 관련 법령(「공직자윤리법」)

● [출제의도]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 vs 겸직금지·사적접촉 신고 구분 여부 확인

● [보기해설]

- ㄱ.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내용,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여 부패 방지
-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와 관련
-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퇴직 공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방지
-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제도 규정 (공직자윤리법)

16. 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인사행정론 - 공무원 유형(임기제공무원 제도)

● [출제의도]

임기제공무원의 **법적 지위(경력직 vs 특수경력직)**와 유형별 특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임기제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경력직공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

● [보기해설]

- ①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 임기제공무원은 일정 기간 임용되는 것은 맞지만 별정직이 아니라 ‘경력직공무원’이다.→ 따라서 별정직이라는 부분이 오류
-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정원 직위에 임용된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상 경력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업무 수행
→ 특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
-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35시간 근무
→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유연하게 운영되는 제도

17.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 ④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한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지방행정론 -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출제의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성 및 기능과 함께 지방교부세 재원 구조(법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50% vs 실제)을 묻는 함정 문제

● [보기해설]

①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

→ 지방교부세의 유형 구성 정확

③ 중앙-지방 및 지방 간 불균형 조정 기능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 수직적 불균형 + 수평적 불균형 모두 조정

④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50%

→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이다.

→ 50%는 명백한 오답 유도

18.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④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재무행정론 - 예비타당성조사(B/C 분석,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 [출제의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대상·분석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특히

□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중립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

● [보기해설]

①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②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포함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분석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함께 실시한다.

→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님

④ 단순 유지보수사업은 면제 대상

→ 도로 보수, 상수도 개량 등은 기존 시설 유지 목적이므로 예타 면제 가능

19.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ㄴ.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계약조건의 정치'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 ②

● [출제영역]

재무행정론 - 예산이론(루빈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

● [출제의도]

루빈의 실시간 예산모형에서 의사결정 흐름 구조 + 특징(느슨한 연계, 정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보기해설]

ㄱ.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제시

→ 루빈은 예산을 단일 과정이 아닌 세입 → 세출 → 균형 → 집행의 흐름으로 파악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 실시간 예산모형은 각 흐름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loosely coupled(느슨한 결합) 구조를 가진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은 '계약조건의 정치'

→ "계약조건의 정치"는 세입이 아니라 균형(balancing) 단계의 특징에 해당

20. 전자정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 ②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 24'가 대표적이다.
- ③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 ④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이론 - 전자정부 유형(G2C, C2G, G2G, G2B)

● [출제의도]

전자정부 유형을 주제(G, C, B)와 목적에 따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특히, C2G 개념과 대표 사례 구분 여부 확인

● [보기해설]

① G4C(G2C)는 국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홈택스)

→ 정부 → 국민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는 대표적인 G2C 서비스

②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 (정부24)

→ C2G는국민 → 정부 방향의 참여(의견제출, 신고 등)를 의미한다.

→ '정부24'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 G2C에 해당

→ 공동생산 설명도 부정확

③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 (온나라 시스템)

→ 정부 내부 간 업무 처리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 G2G

④ G2B는 기업 대상 행정서비스 (나라장터)

→ 정부 → 기업 서비스 (나라장터 = 대표 G2B)